

목차

- A. 미디어비평
- B. 토론
- C. 추가

A. 미디어비평

가. 미디어오늘

- 가구소득 높을수록 어린이 미디어 이용시간 줄어든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6일 발표한 <2023 어린이 미디어 이용조사>에 따르면 만 3~9세 어린이의 하루 평균 미디어 이용시간은 185.9분으로 나타났다. 기기별로는 TV 1시간 13분, 스마트폰 1시간 3분, 태블릿 PC 38분, 컴퓨터 12분 등이다. 코로나 시기인 2020년 어린이 미디어 이용시간은 4시간 45분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26일부터 12월8일까지 만 3세 이상 9세 이하 어린이 보호자 267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만 3~4세 유아의 하루 평균 미디어 이용시간은 184분이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만 2~4세 유아 미디어 이용을 하루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는데, 이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주목할 대목은 소득에 따라 미디어 이용 실태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어린이 미디어 이용시간이 줄었다. 가구소득 월 400만 원 이하 가정 어린이의 하루 평균 미디어 이용시간은 198분이었으나, 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 가정 어린이의 미디어 이용시간은 169분이었다. 가구소득 400만~600만 원 미만 가정 어린이의 미디어 이용시간은 191분이다.

만 9세 어린이 보호자 A씨는 심층 면접에서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보호자가 자녀들한테 더 관심을 많이 쏟게 된다”며 “주말만이라도 단말기나 매체를 안 보고 다른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다”고 했다.

만 5세 어린이 보호자 B씨는 심층 면접에서 “유튜브가 중독성이 있다. 유튜브를 보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이것까지만 볼게요’라는 말이 늘어났다. ‘안보여줘야 되는건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만 8세 어린이 보호자 C씨는 “먹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혼자 찍고, 편집도 혼자한다. 다 유튜브에서 보고 따라하는 것”이라고 했다.

어린이 미디어 이용 허락 사유로는 ‘아이 스트레스 해소·기분전환’(TV 49.8%, 스마트폰 50.8%, 유튜브 58.5%, 게임 60.2%)이 가장 높았으며, ‘보상’이 뒤를 이었다. 보호자들에게 미디어의 부정적 영향을 5점 척도(평균 3점, 5점에 가까울수록 부정적)물은 결과 ‘무분별한 광고 노출’이 3.37점으로 가장 높았다. ‘부적절한 언어’는 3.36점, ‘콘텐츠 폭력성’은 3.17점이었다.

- 사장 퇴진요구 EBS 노조, 쟁의행위 찬성 89%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 비상대책위원회(지부장 박유준, 이하 EBS지부)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EBS 정상화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전체 502명 중 410명(81.7%)이 참여한 투표 결과 찬성이 365명(89%), 반대가 45명(11%)로 집계됐다.

앞서 EBS지부는 지난해 11월22일 임금·단체협상 교섭 전면 중단을 선언하고 경영진 사퇴 요구 농성을 시작했고 지난해 12월부터 김유열 사장 퇴진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EBS지부가 조합원 약 4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김유열 사장 신임 투표에서 92.7%가 불신임 의견을 밝혔다.

EBS지부는 지난 5일 <임단협 협상 결렬, 이제는 사장퇴진만이 답이다>란 성명을 내고 “교섭을 결렬할 수밖에 없던 가장 큰 이유는 비용 절감·노동여건 악화 관련해 구체적인 환경 분석·운용 계획조차 없이 그저 ‘인건비 삭감과 비용 절감’만을 강요하는 무계획적이고 대책없는 사측의 경영 능력에 있다”고 비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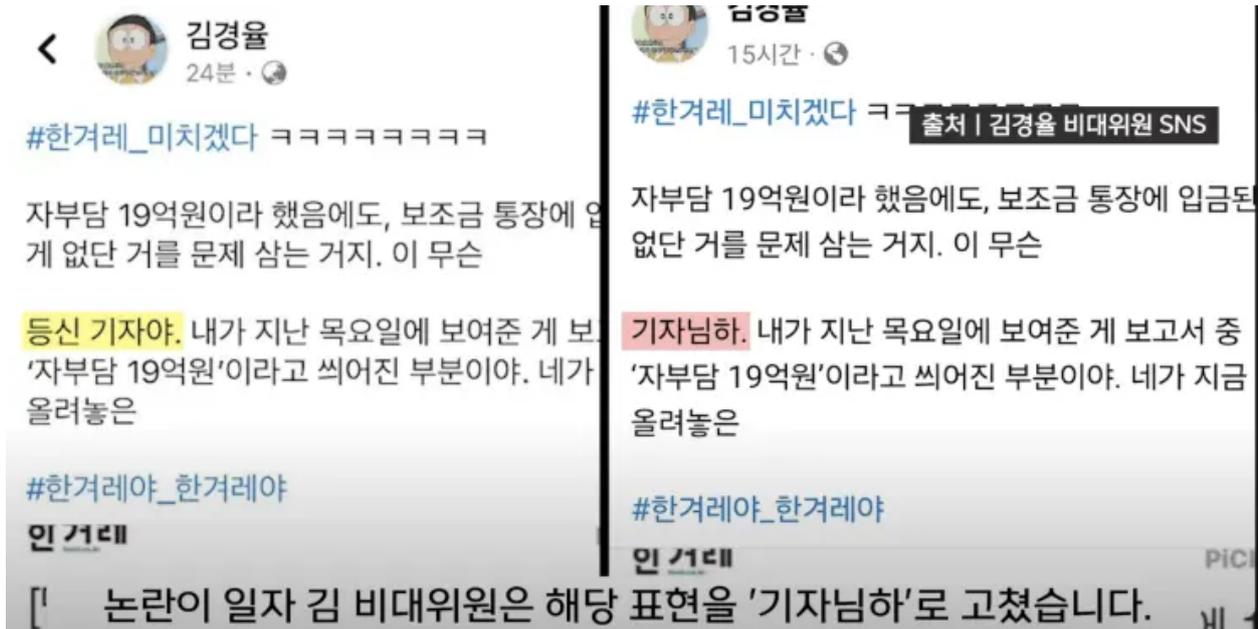
EBS지부는 “노조는 EBS 회생을 위해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사측의 불합리한 비용 절감 방안을 적극 검토해왔지만 협상에 임하는 사측의 태도는 우리 희생과 노력이 무색하게 노조의 요청 자료 하나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었다”며 “그간 교섭자리에서 모든 사측 대표들 발언과 행위는 ‘EBS 살리기’가 아닌 ‘김유열 살리기’에 불과했기에 향후 교섭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 “OO기자” 국민의힘 인사들, 기자 비하까지 ‘언론 탓’ 과열 양상

김경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지난 1일 ‘일본군 성노예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방의 중심에 섰다. 김 위원은 정의연이 국고보조금을 신청(5억)하면서 자부담금(19억 8000만 원)을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별도 부담한 흔적이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겨레는 5일 <김경울 헛발질… 보고서에 19억원 없다더니 있다>에서 김 위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정의연이 여성가족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엄연히 자부담 액수가 명시돼 있고, 여성가족부도 자부담을 납부했다는 정의연 주장을 사실상 시인했다는 내용이다.

그러자 김 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보도를 링크하고 비난의 글을 올렸다. 김 위원은 “#한겨레_미치겠다 ㅋㅋㅋㅋㅋㅋ 자부담 19억원이라 했음에도, 보조금 통장에 입금된 게 없단 거를 문제 삼는 거지. 이 무슨”이라고 했다. 특히 김 위원은 “OO 기자야”라고 비하성 표현을 한 뒤 “내가 지난 목요일에 보여준 게 보고서 중 ‘자부담 19억원’이라고 씌어진 부분이야. 네가 지금 올려놓은”이라고 썼다.



지난 12일 김 위원은 새벽 5시경 “#요며칠_기자들_전화_안_받은_이유 / #정치부_기자는_전혀_다르니_조심하세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김 위원은 “어찌 어찌 외부 비대위원 중 연장자가 되고 기자분들 접촉을 해본 축이라 꼴에 조언이랍시고 한 말”이라며 “정치인들 혹은 정치부 기자들 패턴이 어쩐지 모르지만 #아침_7시_경부터_전화다. 4, 5시에 잠자리에 드는데 무척 힘들다. 한 기자는 미안하단 언급도 없고, 목소리에 물어오는 태도는 피식피식하는 듯 하다. 거의 매일 전화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 위원은 “최근 아래와 같은 기사를 봤다. 조선일보가 먼저. #뭐_어쩌란_건지_모르겠다. 기사를 읽고 뭐 되돌아 볼 일이 뭔지. 곱씹을만한 것이 뭔지 도통…그리고 이 보도를 중앙일보가 받는다. 이게 받아 쓸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조선은 네이버 기준 하루 종일 메인에 올렸고, 중앙 역시 한참을 메인에 올렸다. 댓글 중 상당수는 내 생각과 비슷하다면 비슷하다. 그런데 비슷한 숫자의 다른 댓글은 또 대환장파티이다”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이 지목한 기사는 조선일보 <한동훈이 영입한 3명, 親與 유튜브 ‘빨대왕’ 출연진>과 중앙일보 <한동훈 영입한 인사 3명, 서민 유튜브 ‘빨대왕’ 출연진이였다>이라는 제목의 보도다.

김 위원은 “선정적인 제목 기준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밈처럼 계속 조리돌림된다”며 뉴스 가치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과_접촉하며_가장_내상이_큰일_중_하나 / 정치부 기자는 경쟁 상대가 유튜브라 그러냐? 아래 기사는 막장유튜버의 행태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라고 비난했다.

김 위원은 “어떻게 보면 제 발언이 계속 기사화되면서 민감해지는 상황이었고 (그 대응이) 미숙했다고 본다. OO 기자라는 표현은 바보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 비하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5일 경동시장을 찾은 현장에서 스타벅스와 경동시장의 상생협약 내용을 소개하며 아래와 같이 발언했다.

“이 스타벅스는 사실 업계의 강자잖아요? 굉장히. 여기가 서민들이 오고 그런 곳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곳이 경동 시장 안에 들어와 있죠. 이곳의 한 잔, 모든 아이템당 300원을 경동시장 상인회에 제공하는 상생협약을 맺은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식의 상생모델은 모두에게 좋은것이 아닌가”

이에 한 인터넷 매체가 “여기(스타벅스)가 서민들이 오고 그런 곳은 아니죠”라는 대목을 제목으로 뽑아 보도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에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4인 가족이 요즘 물가에서 연소득 4500만 원으로 생활하려면 매일 스타벅스에서 4500원 커피를 마실 수 있을까?”라며 “진짜 서민의 정서를 모르고 스타벅스의 전통시장 상생 노력에 꼬투리를 잡는 것은 그야말로 달을 보는데 손가락으로 시비를 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본질을 외면한 말장난과 꼬투리 잡기는 김어준의 탄지일보나 하는 짓이다. 대한민국 언론 수준이 이래서야 되겠느냐”라고 언론을 타했다.

앞서 한동훈 위원장은 자신과 관련된 기사 중 오마이뉴스가 부제로 달았던 “문재인정부 좌천 때 저녁에 사직구장에서 야구 관람했다”했지만 그때는 코로나로 무관중이라는 내용을 문제 삼았다. 그는 ‘사직에서 롯데 야구를 봤다’라고 했지 ‘사직 구장에서 야구 관람했다’고 하지 않았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대권주자를 바라보는 정치인이 “심각하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운운하며 조치를 취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돌아왔다.

익명을 요청한 여권 관계자는 “총선 기류가 좋지 않으니 책임 소재를 찾는 모습이 언론에 투영되고 있는 것 같다”며 “비판 의식없이 받아쓰기만 잘해야 언론인가. 특정 보도와 기사에 날선 비난을 내놓은 건 잘못됐다. 문제가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가. 미디어스

- 방통위, 2년 연속 정부업무평가 '꼴찌'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김홍일)가 윤석열 정부 중앙행정기관 업무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역대 최악의 세수 핑크, 1%대 경제성장률에도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최고등급을 받았다. 6일 국무조정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성과를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에서 평가한 결과다. 평가 등급은 A, B, C로 나뉜다.

종합평가 결과, 장관급 기관 중 최하위인 C 등급을 받은 기관은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통일부, 여성가족부 등 4곳이다. 방통위와 여가부는 전 평가 부문에서 C 등급을 받았다. 방통위와 개보위, 여가부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차관급 기관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병무청, 행복청, 새만금청이 C 등급을 받았다.

A 등급 장관급 기관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이다. A 등급 차관급 기관은 인사혁신처,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이다.

국무조정실은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창출, 민간투자 저해 킬러규제 혁파, 비정상적 복원에 기여한 기관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며 “반면 정책성과에 대한 국민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하였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김행 장관 후보자 낙마 사태 이후 김현숙 장관이 현재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다. 여가부 폐지를 목표로 두고 취임한 김 장관은 잼버리 사태 이후 사의를 표명했으나, 윤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으면서 직을 유지하고 있다.

- 'MBC노조 탄압 실형' 김장겸·안광한·백종문·권재홍 사면복권

윤 대통령은 6일 '활력 있는 민생경제와 국민통합을 위한 설 명절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7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윤 정부는 “전직 주요공직자를 기존 사면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추가 사면하고, 여야 정치인, 언론인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여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언론인으로 MBC 김장겸·안광한 전 사장이 '형선고실효·복권' 대상자로, 백종문·권재홍 전 부사장이 복권 대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김장겸·안광한 전 사장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김장겸·안광한 전 사장은 2012년 MBC 파업에 참여했던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에 대해 부당전보, 노조탈퇴종용, 노조원 승진 배제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장겸 전 사장은 2017년 3월 10일 당시 백종문 부사장과 함께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 9명을 MBC 본사 밖 외곽으로 격리하기 위해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등으로 보내 노조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는 안광한 전 사장의 갑작스러운 지시로 2014년 10월 27일 조직 개편을 열흘 정도 앞두고 신설됐다.

안광한 전 사장은 2014년 10월 27일 당시 보도본부장이던 김장겸 전 사장 등과 함께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 28명을 부당 전보하는 등 2017년 3월까지 9회에 걸쳐 조합원 37명을 부당 전보한 혐의를 받았다. 2심 재판부는 노조 운영규약상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형량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백종문·권재홍 전 부사장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김장겸 전 사장은 지난해까지 국민의힘에서 포털TF 공동위원장, 까짜뉴스·괴담방지 특별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권재홍 전 부사장은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두 사람은 보수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에 이름을 올렸다. 김장겸 전 사장은 상임고문, 권재홍 전 부사장은 이사장이다.

이번 특별사면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2012년 총선 당시 군 댓글 공작 등으로 정치에 관여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포함됐다.

- 참여연대 "YTN 사영화는 방통위의 방송 공공성 파괴"

방통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진그룹이 신청한 YTN 최대주주 변경 안건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5일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YTN 최대주주 변경 안건과 관련해 "보류의결한 것이 2개월 이상 지났는데, 사업 신청자나 시청자까지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로 지나가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29일 유진그룹이 신청한 'YTN 최대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보류했다. 당시 심사위원회는 '유진그룹을 YTN 최대주주로 승인한다'는 내용의 종합 의견을 내면서도 유진그룹의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 계획 근거가 부족하고, ESG 경영 평가·사회적 신용·재무적 위험성 등 부정적 요인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당시 방통위는 YTN 최대주주 승인 의결을 보류했다. 최근 유진그룹은 400 페이지가량의 추가 자료를 방통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YTN지부는 5일 <YTN 매각 승인, 왜 불법인가> 설명회를 열고 ▲유진그룹의 적격성 판단 자료가 심사위 해체 이후 제출된 점 ▲유진그룹의 사회적 신용도가 지난해 심사 때보다 더 나빠진 점 ▲유경선 회장 일가의 불법 산지 전용 의혹이 제기된 점 ▲유진그룹이 특수목적법인 '유진ENT'를 통해 최대주주 변경 심사에 나선 점 등을 거론하며 유진그룹의 YTN 인수 부적절성을 강조했다.

이날 고한석 YTN지부장은 2015년 특수목적법인 '경기필'이 경기방송을 인수하려 할 때 최대주주 변경을 불허한 바 있다며 "경기필과 '유진ENT'는 다를 바가 없다. 방통위가 일관된 정책을 가지고 있다면 '유진ENT'를 통한 YTN 인수를 불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고 지부장은 지난해 심사 과정에서 유진그룹은 심사위에 보도·경영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고 "YTN 매각이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은 "유진그룹이 400여 쪽에 달하는 추가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2인 체제의 방통위가 의결할 합법적 근거가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며 "의결을 강행하면 김홍일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뿐 아니라 불법적 매각에 개입한 방통위의 모든 관계자들이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2일 성명을 내어 "방통위가 제대로 된 심사과정을 건너뛰고 2인 체제 의결로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강행할 심산"이라며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공영방송이자 보도전문채널 중 하나가 법

적 절차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사영화될 위기에 있다. 윤석열 정부가 불법한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강행한다면 사법적 책임과 함께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나. 경향신문

- 1면, 경사노위, 의제 확정...사회적 대화 시동
- 8면, 경사노위, '5인 미만 사업장' 400만명 위한 의제는 빠졌다
- 1면, 가슴기살균제 참사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
- 2면, 고법 " '유독물 아니다' 공표, 구매에 영향...공무원 과실"...가슴기살균제 참사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
- 2면, 가슴기살균제 사태 피해자들 "국가 책임 인정 의미 크지만...일부만 배상, 대법서 바로잡아야"

다. 한겨레

- 1면, '가슴기 살균제'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 "성급하게 안전성 보장"
- 6면, 법원, 가슴기살균제 피해 '국가도 범인' 응답했지만...
- 4면, 녹색정의당 합류? 조국·송영길도?... '야권 비례연합' 현실화 변수는
- 4면, 국민의힘, 위성정당 15일째 띄울 듯... '의원 꺾주기' 가능성
- 5면, "검찰정권 탄생 책임져야"...공관위발 용퇴론에 민주당 술렁
- 6면, "삼성 합병, 사업목적 1%만 있어도 승계목적 무죄라는 논리"
- 6면, '이재용 3조 수혜' 간과한 법원

라. 한국일보

- 1면, 가슴기 살균제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 "안전한 듯 방치해 피해 키워"
- 1면, 혼자서 버겁다, 뭉치면 다르다... '벨트'로 맞서는 與 총선 도전자들[벨트의 정치]
- 4면, 수원벨트 "철도 지하화" 한강벨트 "개발 규제 완화" 스크럼 전략
- 4면, '민심 풍향계' 인천서는 여 벨트 전략 아직 미약
- 4면, 민주당 "낙동강 벨트 넘어" 동부산 벨트 적극 공략
- 2면, 100년 전 도둑맞은 부처님·스님들 사리와 사리탑, 미국서 돌아온다

마. 동아일보

- 1면, 탈북민 72% "탈북前 1년간 식량배급 못받아"
- 10면, 탈북민 37% "北서 주택 양도-매매 경험... 역세권 3, 4층 선호"
- 1면, [단독]'트럼프 최측근' 오브라이언 "美전략, 中억제에 초점"... 주한미군 조정 시사
- 3면, "北 보면 韓 자체 핵무장' 주장 공감하지만, 비핵화 꼭 이뤄야"
- 12면, '가슴기 살균제'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 "유해성 심사 불충분"

바. 조선일보

- 1면, '천공-II' 미사일 4조2500억 사우디 수출... "10조까지 늘어날 것"
- 1면, 검찰 '묻지마 항소', 이재용에도 적용하나
- 5면, 삼성 사법리스크 7년... TSMC는 1위로, 인텔도 대약진
- 5면, 기소한 이복현조차 "이재용 사법리스크 일단락 계기 될 수도"
- 1면,尹정부 첫 노사정 대화
- 4면,尹 "노사 문제,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큰 틀에서 논의해야"
- 4면, 52시간·불평등·정년... 모든 노동문제 테이블에 올렸다
- 4면, 대화에 복귀한 한노총 "공무원·교원 노조전임자 근무시간 인정 시행해야"
- 10면, 北 전력공급 하루 4시간... 탈북민 41% "월급의 30% 빼앗겼다"
- 10면, 집도, 식량도, 학원도...北주민들 '내돈내산'
- 10면, 조태열 외교장관 中 왕이와 첫 통화 "탈북민 복송 말아야"
- 12면, "가슴기 살균제 피해, 국가도 책임 있다"

사. 중앙일보

- 1면, 애플·MS의 이사회 80%는 CEO 출신...삼성은 교수·관료 70% [삼성의 과제<하>]
- 4면, '수도권 산토끼' 훔는 한동훈... '집토끼 결속' 챙기는 이재명
- 8면, '천궁- II' UAE 이어 사우디에 4조대 수출...K방산 '중동 훈풍'
- 10면, NYT "러시아, 북 무기 받은 직후 동결자금 120억원 해제"
 - 10면, 김정은 겪은 탈북민 72% "식량 배급 제로"...56% "세습 반감"
- 14면, 가슴기살균제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고법 "원료 안전성 심사 소홀"

→ 경사노위, 가슴기살균제 // 북한 문제, 무기 수출, 정치, 의대증원, 삼성

⇒ 정치 한국 사회 모든 문제 마지막 해결해야 해, 아니면 방법이 없어, 말에 대해 소모적 반박과 재반박 그러면 답이 없어, 제대로 된 언론이 한동훈 말을 분석해 줘야지. 스타벅스 자주 가는 여러분은 졸지에 중산층이 된 거야. 타워팰리스 살고 조폐공사 딸과 결혼했잖아. 윤석열도 그래. 김건희 결단을 못 내리잖아. 그냥 보복심리와 욕망, 패거리. 대통령이 어떤 자리인지 모르는 거야. 스타벅스 이런 일이 많잖아. 서민 코스프레 한다는 뜻이야. 전에 돈까스 프랜차이즈 기초수급생활 자녀 먹고 있는 거 공익신고. 복지센터에 항의민원. 기준이 엄격해. 어쩌다 한두 명 들어갈 수는 있겠지. 심지어 부끄러워 한다고. 진정한 보수가 할 일이 아냐. 연민, 공감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아. 그 때 얼마나 돈까스가 먹고 싶었으면 돈 모아서 왔을까 생각해야지.

⇒ 여론조사공정위. 관련 기관 중 가장 불공정. 자유가 들어가는 단체 치고 ... 진보 단체 예산 다 자르고 주는데 그들이 정말 자유 추구하는 사람들이야? 영구적으로 간부 노릇하면서 진정한 공론장 형성에 독약을 뿌리고 다니는 놈들. / 인민민주주의가 나빠? 공산주의 이상이 무너져서 북한이 나빠진 거지. 무상교육, 무상의료에 그런 지지가 나오는 거야. 극장식 민주주의. 가끔은 공개 처형하고 그런데 세뇌된 거지. 저항의식이 없고 그러나 일말의 장점도 없냐는 말이야. 자본주의도 건전하게 굴러가야지. / 우리나라 최고 번영 시기도 민주주의와 관련되어 있어.

⇒ 지나치지 말고 관점이 생겨야 해. 그래야 쓰지. 앵커링 해야. 그냥 지나가면 시간 낭비.

B. 토론

1. 의대 증원

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현원(3058명)보다 2000명 많은 5058명으로 증원하겠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2029학년도까지 해마다 정원 5058명을 유지해 2035년까지 의사인력을 1만명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규모가 바뀌는 것은 2006년 이후 19년 만이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분야 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의사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집단휴진(파업)을 비롯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전국 시도별 의대 현황
국립·사립·의전원 포함, 괄호 안은 정원



의대 정원, 논란의 역사

연도	의사수(명)	의대 정원 논의 역사
2000년	3507	의약분업 의사단체 ‘의대 정원 10% 감축’ 요구
2006년	3058	의대정원 ‘동결’
2017년	3058	서남의대 폐교, ‘의대 정원 적정 논란’
2020년	3058	코로나19 팬데믹, ‘의대 정원 확대 여론 확산’
2020년	3058	의대생·전공의 총파업, ‘팬데믹 종료 후 논의 합의’
2024년	3058	보건복지부,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규모 발표’

The JoongAng

의대 정원 확대, 정부와 의료계 입장차

● 정부(찬성) ● 의료계(반대)

의사수 절대 부족 vs 의사수 충분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OECD 최하위 수준인 2.6명” VS “인구 감소로 2047년엔 OECD 평균 의사수 넘어서”

필수-지역의료 해결 효과 있다 vs 효과 없다

“필수의료패키지 통해 필수-지역의료로 유도 가능” VS “의사 수 늘려도 필수-지역의료 기피 여전할 것”

The JoongAng

경향신문

- 1면, 내년 의대 2000명 늘려 5058명 뽑는다

내년도 대학별 입학정원은 교육부의 정원 배정 절차를 거쳐 추후 발표한다. 정부는 늘어나는 정원은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배치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정부는 또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율을 현 40%에서 60% 수준까지 높이도록 정책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지역·공공의대 신설 계획은 이번에 발표하지 않았다.

- 3면, 정부 “2035년 의사 1만5000명 부족…졸업 6년 고려 한 번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2021년 한국의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 OECD 평균은 3.7명이다.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학 교육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오늘 보정심에서도 (증원 시)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교육부에서 기본적으로 2000명 수준의 증원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교사·교지·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교육 여건을 충분히 준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면서 “소규모 의과대학의 경우는 정원 확대에 오히려 교육의 질을 더욱 향상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3면, 최상위권 학생 ‘의대 싹쓸이’·n수생 급증…내년 입시 요동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은 특정 모집단위 증원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서울대 의약학계열을 제외한 자연계열 입학 학생 수(1775명)를 넘어서고, 치대·한의대·서울 주요대 약대 입학정원을 합친 수준이다.

앞서 2022학년도에 약대 신입생 1700명을 전문대학원에서 학부 선발로 전환했을 때도 자연계 상위권 학과 합격선에 변화가 생겼고 n수생이 증가하는 등의 영향이 있었다. 이번 의대 정원 확대는 이보다 파급효과가 훨씬 클 수밖에 없다. **종로학원**은 수시모집 지원 규모 등을 봤을 때 2024학년도 기준 9543명으로 추정되던 의대 준비생 수가 2025학년도에는 1만5851명으로 5000명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 3면, 의협, 설연휴 직후 ‘총파업’ 예상

정부가 6일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의료계는 이에 대응해 설연휴 직후 집단행동(파업)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정부 발표에 앞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 발표 시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과 관련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할 때도 파업을 벌였다. 당시 개원의는 물론 전공의·전임의 들까지 참여했다. 의과대학생들은 국가고시 집단거부에 나서기도 했다.

이번에도 ‘젊은 의사’와 ‘예비 의사’들의 파업 동참 여부에 따라 파급력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대형병원에서 일하는 전공의들이 파업에 참여하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한겨레

- 1면, 내년 의대 입학 정원 2천명 확대…의협 “총파업”

의대 정원을 512명 더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던 복지부가 그 규모를 2천명으로 대폭 확대한 건 의료 수요에 견줘 2035년까지 의사 인력이 1만명은 더 필요하다는 추계를 반영한 결과다. **의대 교육 과정을 마치는 데 6년(예과 2년+본과 4년)**이 걸리므로, 2025~2029학년도 입학 정원을 1만명은 늘려야 그로부터 6년 뒤인 2031~2035년에 의사 1만명이 의료 현장에 나올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 3면, 비수도권 ‘작은 의대’에 집중 배정…지역인재선발 60%로

- 3면, 의협, 설 연휴 뒤 집단행동 전망 / 정부, 법에 따라 엄정 대응 방침

- 3면, 의대 입학 노린 N수 열풍 거세질 듯

한국일보

- 1면, 의대 정원 내년부터 2000명 늘린다... 10년 뒤 의사 1만 명 추가 배출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는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40개 의대를 상대로 진행한 수요조사 결과(2,151~2,847명)에 미치지 못하지만 현재 정원 대비 증가율은 65.4%에 이른다. 당초 의료계 예상보다 파격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린 셈인데, 여기에는 의사가 부족해 지역·필수의료가 붕괴하고 있다는 정책적 판단이 작용했다. 다만 전남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요구하는 지역 의대 신설은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2020년 집단 진료거부로 의대 증원을 저지한 전공의들도 최근 설문조사에서 86%가 단체행동 참여 의사를 밝힌 터라 의사들의 단체행동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커졌다. 이에 복지부는 의대 증원 발표 직후 보건의로 위기단계 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하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렸다. 의료법에 근거해 의협 집행부 등 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도 내렸다. 조 장관은 "만약 불법 집단행동을 한다면 관련법에 따라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 3면, 의대 요구에 근접한 파격 증원... "지역·필수의료로 견인할 보완책 필요"

일단 첫 단추는 잘 꿰지만 세부 계획이 더 중요하다. 지역의대가 성장하고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붕괴된 지역 의료·필수의료가 절로 되살아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가 필수의료 종합 대책을 통해 의료사고 안전망 확보, 필수의료 보상 강화, 지역 근무 시 장학금과 정주비용 제공 등 여러 유인책을 내놓았지만, 강제성 없는 경제 적 혜택만으로는 의사들을 지역에 정착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많다. 전문가들은 늘어난 의사 인력이 비필수의료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제어할 강력한 수단이 강구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조승연 인천의료원 원장은 "공공성 확보 없이 인력만 늘리면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등 소위 돈벌이 되는 진료과목 쓸림이 더 심화될 것"이라며 "지역인재로 육성한 의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지역 복무 의무화, 위반 시 면허 제한 같은 벌칙 규정 등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도 "늘어난 정원을 대학 수요가 아니라 지역에 필요한 의사 수를 기준으로 배정해야 한다"며 "그래야 대학병원 부터 동네병원까지 네트워크를 이루며 지역 필수의료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전병왕 복지부 보건 의료정책실장**은 "의대들의 추가 교육 역량과 의지에 비춰 증원 희망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조승연 원장**은 "대학들이 증원을 원하는 건 투자 의지가 있다는 뜻이고, 기 초의학교수 충원과 처우 개선, 교육 인프라 확충 등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의대 증원이 의료 불균형을 정상화하는 단초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 3면, SKY 이공계 정원 절반에 맞먹는 의대 증원... 대입 판도 변동

- 3면, 4년 만에 파업 카드 꺼낸 의협... 정부, 집단행동 금지 명령

동아일보

- 1면, 의대 2000명 더 뽑는다... 現고3부터 5058명 선발

- 2면, 2035년까지 의사 1만명 확충... 지방대-미니의대 위주 증원

구체적인 대학별 정원은 올 4월까지 교육부가 결정하는데 정부는 지방국립대와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늘 릴 방침이다.

예를 들어 국립대 중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등은 의대 정원이 채 50명이 안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의대 정원이 최소 80명까지는 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정원 50명 미만 사립대 중에는 해당 지역에 다른 의대가 없는 울산대(40명) 등의 정원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 사 립대 중 성균관대, 아주대, 차의과대(이상 정원 40명) 등도 증원 가능성이 크다.

- 2면, 의협 "설연휴 뒤 총파업 돌입" 반발... 복지부는 "집단행동 금지명령" 강경

또 이날 오전 의협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설 연휴 이후 비상대 책위원회를 꾸려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00년 의약분업, 2014년 비대면 의료, 2020년 의사 증원 이슈로 파업을 했는데 역대 4번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한 것이다.

- 2면, 의대 입학정원, SKY 이공계열보다 많아져

의대 증원으로 '의대 블랙홀'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지적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단기적으로는 의대 쓸림이 심화될 우려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른 분야와 균형 잡힌 기대소득이 전망되면서 의대 쓸림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 1면, 19년 만의 의대 증원... 올해부터 2000명 늘린다

- 2면, 의협 "16년 뒤면 의사 46% 늘어, 과잉될 것"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의대 2000명 증원 상태가 이어지면 국내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2025년 14만 5875명에서 2040년 21만3456명으로 46% 늘어난다. 같은 기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도 2.84명에서 4.25 명으로 올라간다.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이날 "2049년이면 우리나라 1000명당 의사 수가 5.45명 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41명을 넘어서고 그 격차는 갈수록 벌어질 것"이라며 "의료 현장에 AI(인공지능)가 들어오는 것까지 고려하면 '의사 과잉'은 갈수록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의사 단체 관계자는 “의대 규모를 한 번 키워 놓으면 다시 줄이기가 매우 어렵다”며 “현재 3000여 명인 의대 신입생을 한꺼번에 5000여 명으로 늘리면 ‘과잉’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의사 수가 당장은 부족해 보이지만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 정책은 10년 이후까지 내다보고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을 크게 늘려도 외과·소아과·산부인과 같은 필수 의료나 지역 의료 분야로 의사들이 (증원 비율만큼) 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의협 관계자는 “초저출생으로 신생아가 급감하고 있는데 어떤 의대생이 산부인과와 소아과로 가려 하겠느냐”고 했다. 의료계 일각에선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면 ‘낙수 효과’로 필수·지역 의료 분야로 가는 의사도 늘 것으로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의사 단체는 의사 수가 늘면 의료 행위 자체가 늘어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국민 의료비 부담이 커진다고도 주장한다. 의사 2000명을 더 뽑으면 요양 급여 비용이 약 35조원 증가해 국민 1인당 월 6만원의 의료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추산도 제시했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1980년대 대학 정원을 확 늘렸을 때 의대는 해부용 시체를 확보하지 못해 고생했던 기억이 있다”며 “의대는 실습이 중요한데 갑자기 2000명을 늘리면 어떻게 가르치느냐”고 했다.

지난달 의대학장과 의학전문대학원장 등으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의학 교육 질 저하를 막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막으려면 2025학년도 증원 규모는 총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고 했다.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의료계 내부에선 “최대 가능한 증원 인원은 500명 정도”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덕선 고려대 의대 명예교수는 “현재 전국 40개 의대 중에도 교수 확보 등 운영이 어려운 곳들이 있다”며 “정부가 일선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면 곤란하다”고 했다.

- 2면, 의협, 설 이후 파업 예고...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금지 명령

- 3면, 정부 “필수·지역 의료 살려야... 의대 증원해도 6년 후에나 효과”

올 상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필수 의료 분야 중 하나인 소아과는 지원율이 26%에 불과했다. 각 병원이 필요한 정원은 205명이었는데 지원자는 53명에 그쳤다.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외과 등 다른 필수 의료 분야도 미달이었다. 반면 정신건강의학과, 안과, 성형외과 등 인기 과는 지원자가 정원의 두 배에 육박했다.

지방은 더 심각하다. 2022년 기준 서울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명인데 도 지역은 절반인 1.6명이다. 고액 연봉을 내걸어도 오겠다는 의사가 없다. 충북 청주의 한 종합병원은 작년 4월 연봉 10억원에 심장내과 전문의 3명을 모집했지만 지원자가 없었다. 경남 산청군보건의료원은 연봉 3억6000만원을 내걸고 5차래 공고 끝에 1년 만인 지난해 5월에야 내과 전문의를 구해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이유로 고령화 문제도 꼽힌다. 우리나라는 내년에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 의료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 한국과 인구가 거의 비슷한 영국은 2020년 고령화에 대비해 전국 의대 42곳에서 모두 8639명을 뽑았다. 국내 의대 정원의 3배가량이다. 우리보다 인구가 다소 많은 독일은 같은 해 의대 정원이 9458명이었다. 호주는 의대 총정원이 3800명 수준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인구는 우리의 절반이다.

- 3면, 지역 국립대·미니 의대 위주로 더 뽑아

- 3면, 초기엔 의대 쏠림... 장기적으론 의사 늘면서 정상화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의대 정원 확대로 몇 년간은 의대 열풍이 불 수 있지만, 6년 후 의사 수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면 의대 인기도 점차 수그러들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 연봉과 처우도 결국 수요·공급의 경제 원칙을 따를 것이란 전망이다. 2009년 로스쿨이 도입되기 전까지만 해도 사법시험을 합격한 소수의 변호사가 고소득을 누렸지만, 지금 로스쿨 출신 변호사 중에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중앙일보

- 1면, 의대정원 2000명 늘린다...의사 1만명 확보 충격요법

이필수 의협회장은 이날 오후 “작금의 모든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의를 표했다.

복지부는 의협의 총파업 움직임에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했다. 복지부 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응하는 한편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상황실’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협 집행부에 의료법 제59조에 근거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했다.

- 2면, 수능점수로 보면 “SKY 자연계 68%, 의대 가능”

같은 메디컬 계열에서도 연쇄 이동이 일어날 수 있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의대생 178명이 자퇴 등 이유로 중도 탈락했다. 이 중 77%(138명)가 지방권 대학의 의대생이었다. 특히 인천·충북

등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의 중도 포기율이 더 높았다. 수도권에 인접할수록 '수도권 의대'로 오려는 유인이 강하기 때문이다.

- 3면, [view] '지역 의대 의사' 늘린다는 정부...관건은 '지역 남을 의사'

정부는 입학 때부터 지역 근무를 조건으로 선발하는 지역의사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의 예를 보면 지역인재 선발 의사는 졸업 후 80%, 지역의사제는 90%가 해당 지역에 남는다.

늘린 정원이 필수 의사로 갈지는 미지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일 발표한 필수의료 4대 패키지를 잘 추진해 의사가 유입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필수 분야 전공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일본은 지역별 전문과목 쿼터를 설정해 인기 분야 진입을 막는 방법으로 필수 분야로 유도한다. 신영석 교수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 이런저런 조건을 붙이지 않아도 (기피 과로) 인력이 흘러갈 것”이라고 말한다. 조승연(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인천시의료원장은 “인력을 늘리는 기본적인 일을 했으니 디테일 정비가 필요하다”며 “늘린 인력이 미용 쪽으로 못 가도록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제주대병원 재작년 적자 87억원 정도. 작년에 300억으로 확대. 전공의가 0명인 과도 있는데, 의사 수를 늘리게 좋은 일인지 잘 모르겠고. 상급 종합 병원 지정했는데 제주대병원 떨어졌어. 이유가 제주도 사람 서울로 많이 가다 보니 경기도 서울 지역과 묶여서 탈락. 기본적인 것도 안 되는데 의사 수만 늘리는 게 맞나? 지역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 왜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 보수 진영에서는 해야 한다고 하나? 진보 진영에서는 일반 용역, 서비스와 다르다. 생명이 걸렸다. 경제성으로만 분석하면 군단위 모든 병원 없애야지. KTX 타고 올라가면 되니까. 악순환이야. 한강 소설도. 적자가 나면 정부가 메워줘야 하는 부분. 서울대도 말이 돼? 최고 교수진인데 싹 등록금. 어떻게 가능한가. 정부가 많이 대주니까. 전반적으로 1인당 교육비 지원이 지방대가 더 작아. 인원 늘리면 낙수효과 조금 다르지만, 지방으로 가게 되어 있어.

⇒ 필수 분야까지 낙수효과가 이어지겠니?

⇒ 외과 내과 이런 건데. 처음부터 안 갈 수는 있겠지. 레지던트 정원도 못 채우는 데가 많은데 두고 보라고. 피안성 유행이지만, 차차 통폐합 되겠지. 수료에 따라 자연스러운 것. 필수 이런 것도 의사 많이 공급되면, 과 별로 지역 별로 정교하게 짜서 그런 데 많이 늘려주면 돼.

⇒ 엘리트 타파, 우파 포퓰리즘, 보수지가 힘 실어주는, 법대 - 검찰공화국처럼 의사공화국?

⇒ 검찰에 힘을 줘서 그런거지. 기소권만 가지면 검사 사위 누가 원하겠어. 수사 따로 기소 따로 분리되면 그게 안 될 거야. 물론 크게 본다면, 기득권 세력이 형성되는 곳이 의료계, 법조계. 변호사도 되게 콧대 높고 접근이 힘들었는데 굉장히 싸졌어. 88만원 세대가 있을 정도. 그런 식으로까지 가아지. 지금처럼 문턱이 높아서는 안 돼. 내 돈 주고 치료하면서도 잘해주지만 반말하고 나쁜 놈. 글 쓸 때 좋은 소재. 환자가 약자면 잘 보살펴서 기분 좋게 해줘야지. 갔다 오면 기분 나쁜 게 뭐야.

2. 특별 사면

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경제인, 정치인,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총 980명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사면 대상에는 전직 주요 공직자 8명, 여야 정치인 7명, 언론인 4명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모범수 942명이 가석방되고, 도로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나 면허정지·취소, 면허 시험 응시 제한 등 행정 제재를 받은 45만5398명이 특별 감면을 받는다. 또 서민·소상공인 298만명이 신용을 회복하게 됐다.

2024년 설 특별사면

단위: 명 *사면: 잔형 집행면제, 잔형 감형, 형선고실효, 복권

일반형사범	625
특별배려 수형자	4
중소기업인·소상공인	33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	160
34세 이하 청년	129
경제인	5
전직 주요공직자	16
국방부 소관 군인 및 전 공직자	3
여객 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3
화물 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3
식품접객업체 행정제재 특별감면	1만6446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179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36만3681
공무원 징계사면	7만5086
기타	5
합계	45만6378

자료: 법무부

The JoongAng

설 특별사면·복권 주요 대상자

공직자

김관진(전 국방부 장관)	군 정치댓글 공작	사면·복권
김기춘(전 대통령 비서실장)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사면·복권
김대열·지영관(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	세월호 유족 불법 사찰	사면·복권
소강원(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	계엄문건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복권
서천호(전 부산경찰청장)	이명박 정부 댓글공작	사면·복권

정치인

이우현(전 국회의원)	불법 정치자금	사면·복권
김승희(전 국회의원)	불법 정치자금	복권
심기준(전 국회의원)	불법 정치자금	복권
박기춘(전 국회의원)	불법 정치자금	복권

언론인

김장겸·안광한(전 MBC 사장)	노조활동 부당 개입	사면·복권
백종문·권재홍(전 MBC 부사장)	노조활동 부당 개입	복권

경제인

최재원(SK그룹 수석부회장)	경영비리	복권
구본상(LIG그룹 회장)	경영비리	복권

2024년 '설 특별사면' 주요 대상자

전직 공직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대열·소강원·지영관
전 국군 기무사령부 참모장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

경제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정치인 이우현·김승희·심기준·
박기춘 전 의원

언론인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일반 형사범 (살인·강도·성폭력·조폭 등 제외)
947명

운전면허 등 행정 제재 특별 감면
45만5398명

자료=법무부

⇒ 고대 사장이 밑에 사람들 낙하산 했던 시기. 결속력 강한 3대 단체 중 하나. 공정경쟁 아니잖아.

경향신문

- 1면, 윤 대통령, 김기춘·김관진 특별사면

2022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을 특별사면한 데 이어 자신이 검사 시절 수사·기소한 인물들에게 또다시 면죄부를 준 것이다.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은 “지난해 신년 사면 때 동일한 범죄의 공범에 대한 사면이 이뤄진 점, 기타 정부의 잘못된 관행으로 처벌받은 분들이 다수 사면된 점을 고려했다”며 “(김 전 장관과 김 전 실장의 경우) 장기간 쌓아놓은 능력으로 국가·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사면을 불과 닷새 앞두고 재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고, 김 전 실장은 재상고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형이 확정돼야 사면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이를 두고 두 사람이 대통령실로부터 사면될 것이라는 언질을 미리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권 국장은 “사면 당사자와 사전 교감은 있을 수 없다”며 “사면심사위에서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 사면을 약속받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 4면, 윤 대통령, '관행' 내세워 또 '셀프 사면'... '총선용 특사' 눈총도

정부는 지난해 초 “직책·직무상 관행에 따라 범행에 이르렀다”며 국정농단 가담자들을 대거 특별사면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난해 사면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며 국가기관의 댓글조작,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가담자들을 사면했다. 검사일 때는 중대범죄라 엄벌이 필요하다더니 대통령이 되자 '관행에 따른 범죄'로 규정해 면죄부를 준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 취지에 대해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면받은 이들 대다수가 여권·보수 성향이어서 ‘국민통합’보다는 ‘보수층 결집’에 치중한 편파적 사면, 내 편에 면죄부 주기식 사면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이) 검사로서 법치주의를 적용하던 잣대와 대통령으로서 사면권을 행사할 때 적용하는 법치주의의 잣대가 다른 것 같다”며 “사면 취지에 부합하는 적절한 사면인지 의문이 들고,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사면 사유로 내세우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사면 기준이 매우 자의적이라는 것이다.

- 4면, “명절이 부패정치인에 면죄부 주는 날인가”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정농단을 저지르고 군을 동원해 댓글 공작을 해도 풀어주는 것이 법과 원칙인가”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김 전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고, 김 전 장관은 댓글 공작 관여로 실형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히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서울지검장으로 수사와 기소를 주도해 놓고 실형 선고 6개월 만에 사면하다니 황당무계하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법무부는 이들에 대해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주요 공직자라고 설명했다”며 “국정농단과 군의 선거개입 공작을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이라고 말하는 윤석열 정부의 파렴치함에 분노를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특별사면으로 대한민국의 정의, 법과 원칙을 짓밟았다”며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한 사면권 행사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정 녹색정의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절이 부패정치인들에게 면죄부 주라고 있는 날이냐”며 “이번 사면은 권력자에 아첨하며 죄를 지어도 조금만 버티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사회부정의의 끝판왕”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번에도 대법 최종 판결이 난 지 3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국민의힘 인사를 사면시키더니, 이제는 국정농단 세력, 적폐 세력 특별사면이냐”며 “자기편 살리기를 위해 설계된 특별사면에 ‘국민통합’ 명분은 전혀 울림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겨레

- 1면, 세월호 불법사찰·블랙리스트·댓글공작... '설팔이 특사'로 죄 씻었다

- 2면, 공직 5인방 상고포기 → 특사... 대통령실과 '사전교감' 있었나

한국일보

- 1면, '댓글공작' 김관진·'블랙리스트' 김기춘, 설 특별사면... 법무부 "약속사면 아냐"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브리핑에서 “튼튼한 민생경제를 토대로 국가경제 전반에 활력을 제고하고 정치·이념 갈등을 일단락해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특사 발표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김 전 장관과 김 전 실장이 상고를 취하하거나 포기해 사면을 염두에 두고 정부와의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심사위원 다수가 외부위원인 만큼 교감이나 약속사면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 전 실장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특사에서 빠졌다.

정부는 이날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38만312명도 특별감면 조치하고, 경미한 잘못으로 견책, 불문경고의 징계를 받은 전·현직 공무원 7만5,086명의 징계 역시 사면했다.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 명도 다음 달 중순 신용을 회복하게 됐다.

동아일보

- 1면, **최재원-구본상 복권... 김기춘-김관진 사면**

윤석열 정부 들어 네 번째로 단행된 특사다.

국민의힘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회복을 위한 '민생 사면'이며 사회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발판을 마련하는 '국민 통합 사면'"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 12면, **김기춘·김관진·최재원... 980명 설 명절 특별사면**

중앙일보

- 8면, **김기춘·김관진 설 특사...연체자 298만명은 '신용사면'**

⇒ 전염병의 정치 경제 사회학. 강의 자료 참고해서 글 써봐. 의대증원도 그렇고, 스타벅스나 서민도 좋아. 확대하면 진보와 보수 제시어에도 쓸 수 있어. 거창하게 유래 쓰고 이러면 안 돼. 다 나왔던 이야기. 몇 해 전 기초 생활수급자 자녀가 돈까스 먹는 거 항의 민원을 넣은 사례. 내 자녀들이 그런 데 가서 먹을 때 내 세금으로 개들도 거기서 먹는 게 싫은 거야. 거기는 보편 복지 저항, 높은 조세 불만 등 의식 속에 많은 게 들어 있어. 진보는 그럼 뭐야? 재들이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친구들이 먹는 돈까스! 흐뭇하게 보는 공감과 연민. 한 사건에 다 드러나. 그런 걸로 풀어나갈 수 있어야 실력.

C. 추가

경향신문

2024-02-07 (수) 003면

김용민의 **그림마당**
yongmin@kyunghyang.com



중앙일보

2024-02-07 (수) 030면

박용석 만평



parkys@joongang.co.kr

한국일보

2024-02-07 (수) a25면

한국 만평

배계규



국민일보

2024-02-07 (수) 002면

국민 만평
서민호



min3018@kmb.co.kr

서울신문

2024-02-07 (수) 025면

조기영의 세상터치 cmseong@seoul.co.kr



⇒ 영화인이 빨갱이가 많은 이유? 기성 체제 옹호는 히틀러 세대와 똑같잖아. 신문도 문화지 기자는 인정해. 문화산 업론이라는 학문 분파가 있어. 버밍엄대가 진원지. 폐과해서 골든스미스로 가서 너무 잘 돼. 문화 뿐만 아니라 젠더도 합쳐져서 굉장히 명성을 갖게 돼.

⇒ 외국은 훨씬 다당제. 우리는 양당제라고 하지. 기존 양당제도 진보와 보수로 있어야지, 보수로 두 개 있으면 미국 이랑 똑같잖아. 가장 살기 힘들어지는 나라.

- 경향신문, 정희진, 한동훈 위원장의 “동료 시민”
- 경향신문, 여적, ‘서울의 봄’ 정선엽 병장
- 경향신문, 나원준, 전환의 시대 케인스의 깨달음
- 경향신문, 안주연, 도파민 중독이라니요
- 한겨레, 이상헌, 유예와 거부
- 한겨레, 유레카, 대담 녹화에서 방송 사이, 윤 대통령의 ‘사흘’
- 한겨레, 이춘재, 어쩌다 검찰이 이 지경이 됐나
- 동아일보, 송평인, 검사 윤석열과 左동훈 右복현의 ‘수사 농단’
- 중앙일보, 신성식, “실비 있어요” 병원·환자 ‘야합’ 탓 도수치료만 1조, 건보도 휘청
- 중앙일보, 최안나, 시험관임신 지원보다 청년층 대상 난임 예방 정책이 절실하다
- 중앙일보, 정재홍, 미국인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
- 중앙일보, 정운찬, 포퓰리즘식 ‘은행 때리기’를 경계한다